

새정부 국정아젠다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전략

2008. 2.

< 목 차 >

■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	1
■ 수도권 규제완화	2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1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3
■ 대전광역시 조직개편 방안	38

■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

- 국가비전
 - ▶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 국정철학
 - ▶ ‘화합적 자유주의’ (Harmonious Liberalism)
- 행동규범
 - ▶ ‘창조적 실용주의’ (Creative Pragmatism)
- 국정목표
 - ▶ ‘신발전체제’
- 5대 국정 지표
 - 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 ② 활기차고 열린 시장
 - ③ 능동적 복지와 高신뢰사회
 - ④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 ⑤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 국정아젠다
 - ▶ 작은정부의 구현
 - ▶ 규제완화 추진
 - ▶ 광역경제권 구상
 - ▶ 한반도 대운하

■ 수도권 규제완화

○ 규제완화 동향

○ 우리나라 수도권규제 제도의 실태

- 규제(regulation)이란 법적 주체의 행위나 활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며, 현재 수도권규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공장 중 도시형 업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신·증설 금지 (아산산단 제외) ◦ 14개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100% 증설 허용 ◦ 외투 기업 25개 업종 한시적 허용('07년 말까지) ◦ 8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 한시적 허용('06년 말까지) ◦ 중소기업 공장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공해없는 중소기업 신·증설허용(1천㎡이내)
	◦ 공장총량 규제		
대 학	4년제	신설금지 (서울로는 이전 금지)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 허용
	전문 (산업)	신설허용 (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총량규제 ▶ 4년제 대학 증원은 심의 후 허용,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이내 허용, 초과는 심의 후 허용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금지 (중앙부처 제외) ◦ 증축·매입·임차는 심의 후 허용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규제 폐지	금 지
개 발 사업	택지 조성	100만㎡이상 심의 후 허용	
	공업 용지	30만㎡이상 심의 후 허용	
	관광지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조 세	취·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	-	-

-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은 크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억제
-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
- 각종 중과세 및 감면제외 및 지원혜택의 배제

규제대상

-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공장·연수시설·판매 시설·업무시설 등의 신증설
-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규제수단

- 물리적 규제: 금지되는 행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되는 행위, 총량규제
- 경제적 규제: 과밀부담금,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중과세

규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강도가 높음
-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자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제의 강도가 아주 높음

-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근거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개별법(‘한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

○ 수도권규제완화의 전개과정

<p>수도권규제 강화기 (80년대초-IMF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1990년 전반까지 강력한 수도권규제정책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1982)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01)에서의 수도권규제강화 및 지방육성 ◦ 1990년 전반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 (수정법 개정)
<p>수도권규제완화기 (IMF이후-200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IMF의 경제위기는 시장경제논리의 우세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 촉발 ◦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첨단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 1998년 외국인 투자유지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에 일부업종의 외국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 2003년 수도권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과주공장의 신설 허용 ◦ 2005년 5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분야를 25개 첨단산업으로 확대허용 ◦ 2005년 11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대기업 8개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 허용
<p>수도권규제약화기 (2006년초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기 민선자치의 출범전후로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면목으로 수도권규제를 완전히 완화시키려는 ‘대수도론’이 본격화)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의 입지규제에서 성장관리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수도권규제가 상당히 완화됨 ◦ 2006년 6월부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공장부지의 20-30% 증설 허용

○ **새정부의 수도권정책에 대한 방향**

- 새정부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전반적으로 혁파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임
-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함
- 따라서 수도권에서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저해해 왔던 각종 규제는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ㄱ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함¹⁾**

-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런던, 파리, 뉴욕 등 어느 대도시권보다도 높은 수준임
-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 수도권의 경우 2000년부터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4-5개의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우리의 실정과는 다름
- 또한 북경권의 경우는 해가 갈수록 환경적 비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구분	면적(km2)	인구(만명)	인구밀도(인/km2)
런던권	20,590	1,549	752
파리권	12,001	1,113	926
뉴욕권	33,728	2,154	639
동경권	13,281	3,444	2,593
북경권	16,800	1,456	867
상해권	6,341	1,711	2,698
수도권	11,730	2,378	2,027

1) 나중규·박성덕 (2007),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대구경북발전연구원, pp. 46-48

○ 참여정부의 1-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²⁾

-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전국인구의 48.3%(2005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액(2005년 기준)의 47.7%, 전국 제조업체의 56.6%(2004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85.6%(2003년 기준)가 집중

구 분		전 국	수도권(%)
인 구 주 택	면 적(km ²)('05)	99,646	11,730(11.8)
	인 구(천명)('05)	49,268	23,782(48.3)
	인구밀도(인/km ²)('05)	494	2,027
	주택보급률(%)('04)	102.2	93.9
지 역 경 제	지역총생산액(십억원)('04)	787,796	375,875(47.7)
	제조업체(개소)('04)	113,310	64,124(56.6)
	서비스업체(개소)('04)	759,591	365,029(48.1)
	금융 예금(십억원)('05)	561,946	381,040(67.8)
	금융 대출(십억원)('05)	613,922	409,655(66.7)
기 능	4년제 대학수('05)	173	68(39.3)
	공공기관수(개소)('03)	403	344(85.4)
	의료기관(개소)('03)	45,772	23,079(50.4)
	자동차(천대)('05)	15,397	7,114(46.2)
	4년제 대학수('04)	100	87(87.0)

※ 자료 : 건설교통부, 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거의 완화되지 않고 있음³⁾

2) 변창흠 (2007),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수도권정책의 과제」, 『수도권 규제완화 토론회 자료집』,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등, pp. 14-15

3) 제1단계(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의 활성화 정책 등), 제2단계(기업대책 ①세부담경감 ②인력난해소 ③산업용지공급확대 ④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추가지정 ⑤도시개발권 ⑥출중제외의인정 ⑦지방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람대책 ①고품질주택공급 ②지방 초·중·고 교육 수월성 제고 ③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④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⑤지역선도도시 정주여건 확충 ⑥사회개발투자 ⑦지방재정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 1980년대 연간 3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던 인구가 1990년대 후반 들어 10만명 이내로 줄어들었으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20년에는 21만명까지 확대
- 인구증가율의 측면에서도 수도권 집중현상을 알 수 있음

구 분	1980-2000	2000-2004	2004-2030
수도권	60.6%	8.0%	15.4%
충청권	6.8%	3.3%	5.4%
영남권	12.5%	12%	-9.5%
호남권	-13.6%	-1.7%	-21.5%
강원/제주	-11.3%	1.2	-10.9

- 2006년에는 전년도 대비 12천명이 줄어든 129천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하였으나, 수도권의 자연증가인구(출생인구-사망인구)를 고려하면 수도권의 인구는 연간 20-30만명에 이르고 있음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입(천명)	517	519	480	585	586	586	625	611	589	575
전 출(천명)	463	456	471	490	436	450	416	474	448	446
순이동(천명)	54	62	9	95	150	136	210	137	140	129

※ 출처: 통계청(2006)

- 통계청이 2002년에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 비중은 2010년에 48.3%, 2020년에 49.8%, 2030년에 50.8%였으나, 2005년에 2010년의 추계인구를 이미 초과
- 통계청이 외환위기 이후의 수도권 인구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계한 수도권의 장래인구 비중은 2020년에 52.3%로 종래 추계인구보다 약 100만 명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에는 53.9%로 종전의 추계보다 3.1% 포인트가 증가

- 통계청 고용통계(06.8)에 따르면, 수도권 일자리는 전국의 49.1%를 차지함

- 현재일자리: 2,299만개, 02년(2,217만개)에 비해 824천개 증가
- 수도권(49.1%): 02년에 비해 836천개 일자리 늘어 8.0%의 증가(경기도 672.8천개, 서울 119.8천개, 인천 43.5천개 증가)
- 비수도권: 같은 기간에 12천개(-0.1%)가 감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증가수 (천개)	119.8	-78.7	20.2	43.5	12.3	12.4	18.5	672.8	-19.2	-4.7	47.5	-20.6	-66.2	-2.0	71.9	14.6
증감률 (%)	25	-46	17	37	20	19	39	15	-28	-0.7	5.3	-24	-67	-15	51	5.4

※ 자료: 통계청 (2002-2006년 사이)

- 규모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전 실적(2000~2005)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44	58	6	47	49	11	314	121	20	62	126	25	3	2
5명이하	84	6	0	2	3	2	58	4	2	2	4	1	0	0
6-10명	166	15	1	10	13	4	75	20	1	13	9	5	0	0
11-30명	295	30	2	11	15	1	110	42	9	19	44	11	1	0
31-50명	110	3	0	12	5	2	32	21	5	7	20	1	1	1
51-99명	87	4	0	6	4	0	20	18	1	9	20	4	0	1
100명 이상	102	0	3	6	9	2	19	16	2	12	29	3	1	0

- 5개 초광역대도시권별 주요 현황

대도시권명칭	수도권	광역대구권	광역부산권	호남권	충청권	전국
소속지자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면적 (km ²)	28,342	19,909	12,341	20,628	16,570	97,790
인구 (명)	24,082,002	5,050,735	7,598,474	5,007,697	4,771,840	46,510,748
제조업체수 (개)	65,737 (58.19%)	12,906 (11.42%)	19,373 (17.15%)	6,990 (6.19%)	7,967 (7.05%)	122,973 (100.00%)
제조업 부가가치액 (백만원)	119,006,873 (45.28%)	47,613,172 (18.12%)	65,713,112 (25.01%)	27,481,800 (10.46%)	2,982,961 (1.14%)	262,797,918 (100.00%)
총사업체수 (명)	1,591,821 (50.58%)	362,803 (11.53%)	539,967 (17.16%)	342,150 (10.87%)	310,618 (9.87%)	3,147,359 (100.00%)
대학교수 (명)	76 (44.44%)	21 (12.28%)	18 (10.53%)	27 (15.79%)	29 (16.96%)	171 (100.00%)
대학생수 (명)	552,884 (44.12%)	144,647 (11.54%)	180,360 (14.39%)	15,388 (12.24%)	221,761 (17.70%)	1,253,040 (100.00%)
대학원생수 (명)	167,784 (59.91%)	22,775 (8.13%)	29,469 (10.52%)	26,243 (9.37%)	33,776 (12.06%)	280,047 (100.00%)
벤처기업체수 (개)	8,086 (69.89%)	777 (6.62%)	1,141 (9.72%)	691 (5.89%)	1,043 (8.89%)	11,738 (100.00%)
공공기관수(개) 현재	347 (85.05%)	1 (0.25%)	8 (1.96%)	5 (1.23%)	47 (11.52%)	408 (100.00%)
공공기관수(개) 이전후	184 (46.23%)	26 (6.53%)	43 (10.80%)	36 (9.05%)	109 (27.39%)	398 (100.00%)
국내특허출원 (개)	6,572 (75.94%)	469 (5.42%)	482 (5.57%)	309 (3.57%)	822 (9.50%)	8,654 (100.00%)
지자체예산액 (백만원)	40,007,471 (44.97%)	10,057,268 (11.31%)	13,964,941 (15.70%)	14,019,689 (15.76%)	10,906,851 (12.26%)	88,956,220 (100.00%)

※ 자료 : 강원도

- 업종별·시도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전 실적(2000~2005)

구분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계	844	58	6	47	49	11	314	121	20	62	126	25	3	2
음·식료품	60	0	0	0	2	0	39	8	1	1	5	4	0	0
섬유의복	6	0	0	0	1	0	1	3	0	0	1	0	0	0
가죽 가방	13	1	0	0	0	1	5	3	1	0	2	0	0	0
석유화학	5	0	0	0	0	0	0	2	0	0	3	0	0	0
종이 인쇄	22	0	0	0	0	2	7	8	2	0	2	1	0	0
비금속	39	0	0	0	0	2	11	10	4	3	7	2	0	0
철강	34	2	0	0	0	1	6	10	0	0	15	0	0	0
기계장비	114	3	0	0	3	4	36	23	0	15	27	3	0	0
전기전자	117	3	2	1	8	0	31	9	7	21	24	8	2	1
의료정밀	74	0	0	1	3	0	55	2	0	8	5	0	0	0
자동차	71	0	1	3	0	0	15	34	1	3	13	0	1	0
기타제조	223	11	0	32	26	0	103	9	4	10	21	7	0	0
도소매	10	9	0	0	1	0	0	0	0	0	0	0	0	0
운수	10	9	0	0	0	1	0	0	0	0	0	0	0	0
통신	8	1	1	4	0	0	0	0	0	0	1	0	0	1
금융보험	7	5	2	0	0	0	0	0	0	0	0	0	0	0
컴퓨터	23	12	0	2	4	0	5	0	0	0	0	0	0	0
교육	2	1	0	0	1	0	0	0	0	0	0	0	0	0
오락	6	1	0	4	0	0	0	0	0	1	0	0	0	0

※ 자료: 강원도

- 그동안 수도권 경쟁력의 저하 원인으로 수도권 규제를 들고 규제완화가 경쟁력 제고의 유효한 수단으로 주장되어 왔음
-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어떤 부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못함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선육정책이 없는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양극화를 가속시킬 수 있음

- 2008년에 출범하는 새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는 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규제가 지속되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
- 이와 때를 맞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들은 새정부에게 건의할 규제개혁과제(약 95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수위에 제출한 상태임

- 공장입지 및 토지 부문: 수도권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등 12개
- 금융 및 세제 부문: 수도권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중과세 폐지 등 23개
- 노동 및 안전부문: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연장 등 20개
- 주택·건설부문: SOC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기간 확대 등 26개
- 환경부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개선 등 7개
- 기타: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 12개

-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강원도 권과 충청권임

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 이미 확정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새정부 운영의 핵심인 민영화, 규제완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당초 규모에 훨씬 못 미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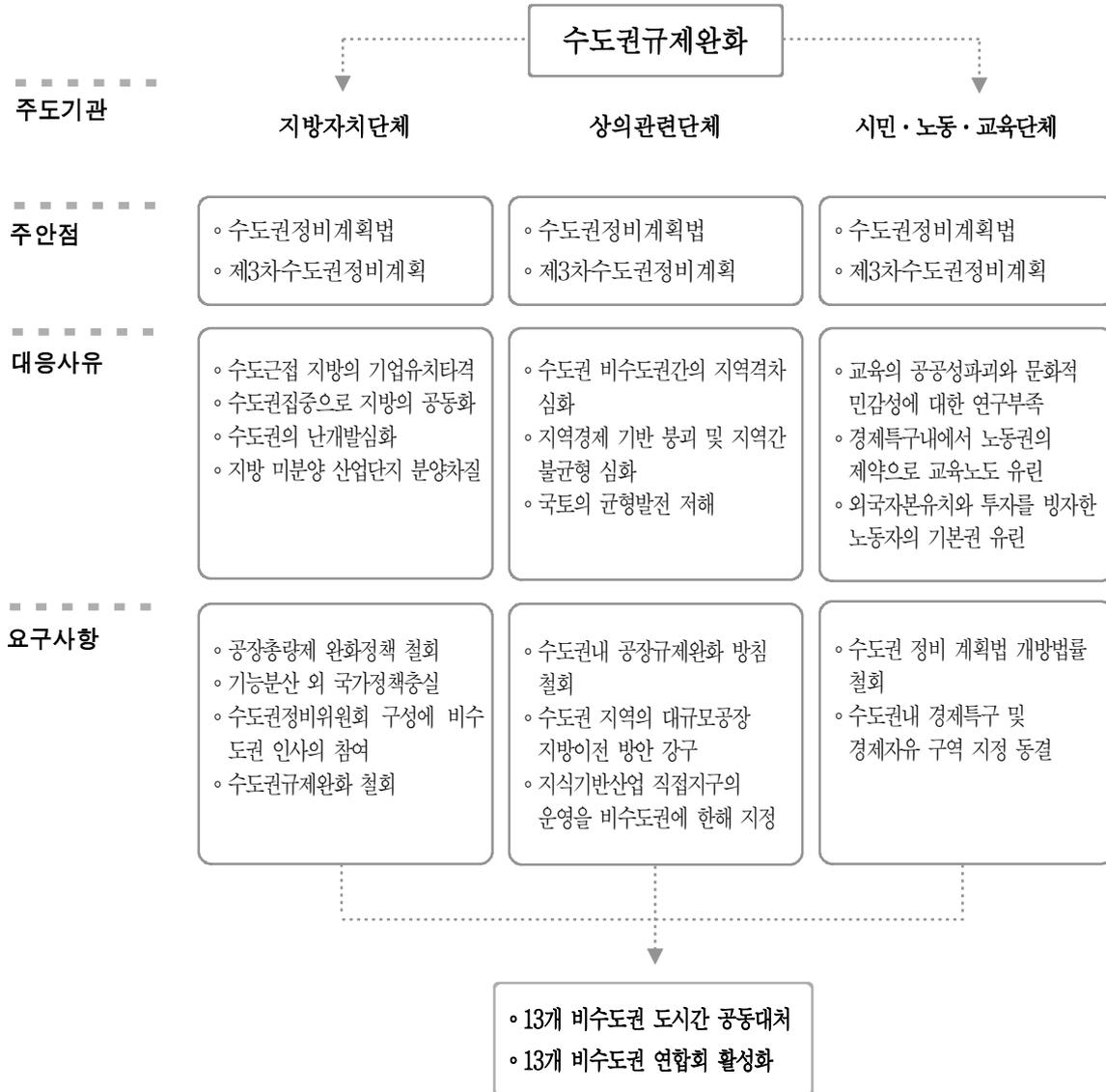
- ▶ 공공기관의 민영화 추진-혁신도시의 건설 위축
- ▶ 규제완화 추진-기업도시 건설 차질
- ▶ 정부조직개편-행정도시 규모의 축소 우려

- 따라서 새롭게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에 기존의 핵심적인 균형발전시책(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 ▶ 동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내용은 ‘동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함
- 또한, 가칭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 제정시 비수도권 육성제도를 도입
 - ▶ 예컨대,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역 내에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금융, 교육, 의료, 문화 등) 및 SOC(교통, 물류기지) 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제도
- 수도권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유지 및 기준 완화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인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유지함과 동시에 이전기업의 지원조건을 대폭완화 함
 - 현행 지원대상인 기업 및 연구소 뿐만아니라 수도권 소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연수기관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수위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5+2 구조의 재편(안)의 개편
 - 인수위는 전국을 5대(수도, 충청, 호남, 대경, 동남) 광역경제권과 2대(강원, 제주)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조화 하여, 수도권과 4개의 경제권을 동등한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발표함
 - 그러나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과 여타의 광역경제권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음
 - 따라서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하되 강원과 제주와 같이 ‘수도권’도 나머지 4개 경제권과는 특별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7개의 광역권을 초광역권(수도권), 중광역권(충청, 호남, 대경, 동남), 특별광역권(제주, 강원) 등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함
 - ▶ 광역경제권이 5+2 구조로 고착될 경우,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 있음
 - ▶ 따라서 수도권을 초광역권으로 설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치중하고, 중광역권은 국제적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특별광역권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 중앙의 ‘광역경제권(5+2)’ 관리기구 운영시 7대권역 대표자 참여
 - 가칭 ‘광역경제권추진위원회’ 또는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의 구성시 7대 권역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13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활성화를 통한 공동 대응
 - 수도권집중과 규제완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수도권자치단체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가칭 ‘비수도권지방자치단체연합(1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제안과 대응체제구축
 - ▶ 이것은 영국의 LGA(Local Government Association)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의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기능과 권한 면에서 차별화된 협의체임
 - 가칭 13LGA는 중앙에 본부를 두고, 각 광역경제권별로 지역사무소를 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체계>



수도권 규제완화의 충청권 및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수도권 규제의 내용은 공장신증설, 대학신증설, 공공청사신증설, 대형건축물의 신증설,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 중과세제도가 있음
- 규제완화는 일반적으로 기업규제 즉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된 것이 주종이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충청권 및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음

구분	파급효과	대응전략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공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그동안 충청에 이전했던 기업의 U-turn 현상의 가속화 초래(02-06년사이 대전에 57개, 충북 124개, 충남 197개 이전) ○ 충청권으로의 공장이전 계획의 변경 및 취소사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친기업적 정책개발과 반기업적 규제의 발굴 및 혁파(충청권경제인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가시화를 위한 로드맵의 작성과 인센티브개발
대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의 기업 U-turn 현상에 의한 피해는 충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대덕특구의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침(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내의 14개 첨단업종 100% 증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첨단기술산업화단지 조성의 가시화 및 입지의 인센티브 홍보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청사진과 입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홍보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 광역경제권의 구상과 충청권의 공동발전방안

○ '5+2 광역경제권' 공표와 충청권경제협력의 활성화

- 인수위의 광역경제권발전 구상의 발표와 충청에 미치는 영향

◦ 광역경제권 설정배경과 원인

- ▶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확보
- ▶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지역간의 공동번영 추구
- ▶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 구축
- ▶ '수도권 vs 지방'이 아닌 '수도권 & 지방'의 개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도모
- ▶ 중국 등 경쟁국 경제거점지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광역경제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폭

◦ 창조적 광역발전 6대전략

- ①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규제 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③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④낙후지역의 新발전지대로의 전환
- ⑤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⑥협력, 통합, 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충청권에 미치는 위기요인

-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충청권 경제위기론 현실화
- ▶ 충청권내 특정지역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 및 양극화 현상 발생

◦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기회요인

- ▶ 기획, 재정 자율권 보장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 가능
- ▶ 기 출범된 충청권경제협의체의 기능 수행에 탄력
- ▶ 국토중심지로서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허브지역으로 발전 가능
- ▶ 세종시-대덕특구-오송·오창을 연계한 광역경제권 구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충청권 경제협의체의 조기 활성화

- 충청권경제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충청권특별법’(가칭)과 새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가칭)과의 관계 재정립
- 충청권 3개시도의 공조협력지원체제의 보강

- 충청권경제협의체 경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역할, 규모, 회의빈도 재조정
- 독립된 사무국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발전연구원내 설치)
 -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불가 및 타 시도에 주도권 상실
 - 자율형(충청)권 지역경제본부와 충청권경제협의체 사무국의 통폐합 운영 적극추진
 - 충청경제권 지역경제본부의 대전시 유치에 유리한 교두보 확보
-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구체적 로드맵 완성
- 충청경제협의체 발족시 기 합의된 추진과제 중 실천가능한 공동협력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조기실행

- 충청권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

- 기업친화적 금융서비스, 세제지원 등 대기업 유인체계 공동개발
- 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으로 기업입주환경 개선
- 교통 및 상업 인프라의 구축
- 지자체 차원의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추진
- 국제적인 거점기업의 역내 유치
- 대전-충청 해외무역사무소의 공동운영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충청광역경제권 형성으로 인한 문제점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새로운 충청권 지역협력사업의 발굴필요

- **월드 디즈니랜드 공동유치사업**
 - 서울시의 월드 디즈니랜드 유치활동 소강상태
 - 국토 중심부-교통 중심지 이점으로 타당성 확보
 - 5+2광역경제권과 연계한 비수도권 안배 차원에서 설득력 증가
 -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세종시-대전시 접경지역 활용

- ▶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의 통합 가능성 고려
- ▶ 경제적 파급효과 지대 : 일자리 창출, 관련산업 spill-over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충청권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 ▶ 일제로 3개 시도의 백제문화제 공동참여 등
- 충청권 관광협력사업
 - ▶ 충청권 온천관광벨트 구축 및 온천축제 공동개최
 - ▶ 대청호 크루즈관광사업 컨소시엄 추진 등
- 충청광역권 스포츠 리그 구축사업
 - ▶ 충청권 고교야구 및 대학축구대회 정례화 등
 - ▶ 충청광역권 스포츠 리그 구축사업 : 고교야구 및 대학축구 등
- 지역특산물 공동시장 운영(e-마켓 포함)

충청권 공동발전연구단 운영 활성화

○ 설립목적

- 대전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 충청권 연구교류 협약은 행정권역으로 나누어져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권 경제·교통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연구
-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원간 협력 뿐 아니라 지역전체의 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충청권 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됨과 동시에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

○ 사업의 내용

- 충청권 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한 연구
 - ▶ 광역 경제비즈니스 벨트 구축에 관한 연구
 - ▶ 광역 경제권의 추진조직 및 제도개발
- 광역 교통망 및 물류유통체계 연구
 - ▶ 세종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축 연구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연구
 - ▶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리 개발
 - ▶ 충청권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연구

○ 추진 체계

- 충청권 공동발전 연구단 구성
 - ▶ ‘경제팀’, ‘교통·물류팀’, ‘관광팀’, ‘환경팀’ 등 4개팀 12명으로 구성
 - ▶ 연구인력의 상호지원
- 충청권 공동발전 연구단 사무국 운영
 - ▶ 공동 연구수행 및 세미나 개최
 - ▶ 각종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상호 제공
 - ▶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Network 구축

충청광역경제본부의 대전시 유치전략

- 광역경제권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 → 충청광역경제본부 → 시도지방자치단체 ◦ 사업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특별회계(국가균형특별회계 재편+국가보조금+지방교부세+신규재원)
--

- ‘광역경제본부’의 조직형태와 기능은 어떤 것인가?

사례	형태	관리운영	정부관계
영국	지역개발청(RDA)	이사회, 정부재정지원	정부산하
미국	지방정부연합	민간, 예산운영	자율조직
일본	특별지행행정기관	정부재정	국가산하기관 (경제산업국)
인수위원회	특수목적법인(SPC)	국가보조+민간자본(?)	(?)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청	국가+지방재정	지자체소속
자치정보화조합 등	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조합회의, 지자체 출연금	특별지방자치단체

- 인수위의 발표에 의하면, 광역경제본부는 대덕 R&D 특구지원본부와 같이, 중앙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면 지방자치제와 분권화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의 지역정부모형(regionalism model)을⁴⁾ 도입해야 함

4) 현대 사회의 생활권이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의 분리보다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확대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역사적으로 고정된 종래의 기초정부 경계와 구역에 근거한 거버넌스구조를 넘어서 생활권과 시장경제의 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적 외부효과와 확대로 인한 거버넌스 중심의 광역행정체제 모형

- ‘충청광역경제본부’ 유치를 놓고 어디와 경쟁해야 하는가?

- 대전 : 대덕 R&D 특구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유치를 주장할 것임
- 충북 : 충북은 오송·오창 지역에 유치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충남 : 정부조직개편으로 세종시 규모의 축소에 대한 대체대안으로 행복도시에 유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충청광역경제본부’ 유치경쟁에 있어서 대전의 강점은 무엇인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덕R&D특구의 성장과 도시기능의 집적

- 그럼 ‘충청광역경제본부’가 입지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 과학엑스포공원의 일부용도변경(상업용지)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입지시킴

- ‘충청광역경제권본부’의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지역본부유치추진팀’ 가동
- 광역경제지원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유치논리의 개발과 예정입지의 타당성 분석을 조기에 실시함
 - 광역경제권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실시

ㄱ **대통령공약사업 이행·추진을 위한 대응 전략**

○ ‘대전시↔대덕특구지원본부↔행복도시건설청’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7대공약	핵심내용	주된 파트너	비고
① 대덕첨단기술 산업화 단지 조성	▶ 특구의 성과물을 연계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산업단지의 조성	▶ 특구지원본부 ▶ 산업자원부	
② 첨단과학기술 테마벨트 조성	▶ ‘대덕연구단지-엑스포과학공원-국립중앙박물관’을 잇는 벨트조성	▶ 특구지원본부 ▶ 교육인적자원부	
③ 로봇연구 및 생산 클러스터 구축	▶ 기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로봇산업을 이끌어 국가경쟁력 제고	▶ 특구지원본부 ▶ 과학기술부	특화사업
④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 집적화 단지조성	-	-	대체사업 모색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대전입지	▶ 대덕특구의 역량과 기존인프라에 적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 특구지원본부 ▶ 산업자원부 ▶ 보건복지부	
⑥ 세종시권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 세종시의 현재 교통계획은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성이 낮아 대전, 청주와의 접근성이 미흡	▶ 세종시건설청 ▶ 건설교통부	
⑦ 대전국립현대사 박물관 건립	▶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등 역사교육장화 ▶ 문화콤플렉스조성, 원도심활성화	▶ 문화재청 ▶ 건설교통부	세종시의 협조를 통한 사업추진

ㄱ **광역경제권 관련 학술대회 개최**

○ 주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방안

○ 세부과제

- 광역경제권체제하에서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역할과 위상
- 광역경제권의 바람직한 행정체제 모형
- 광역경제권의 재정운용 방안

○ 일시: 2008년 3월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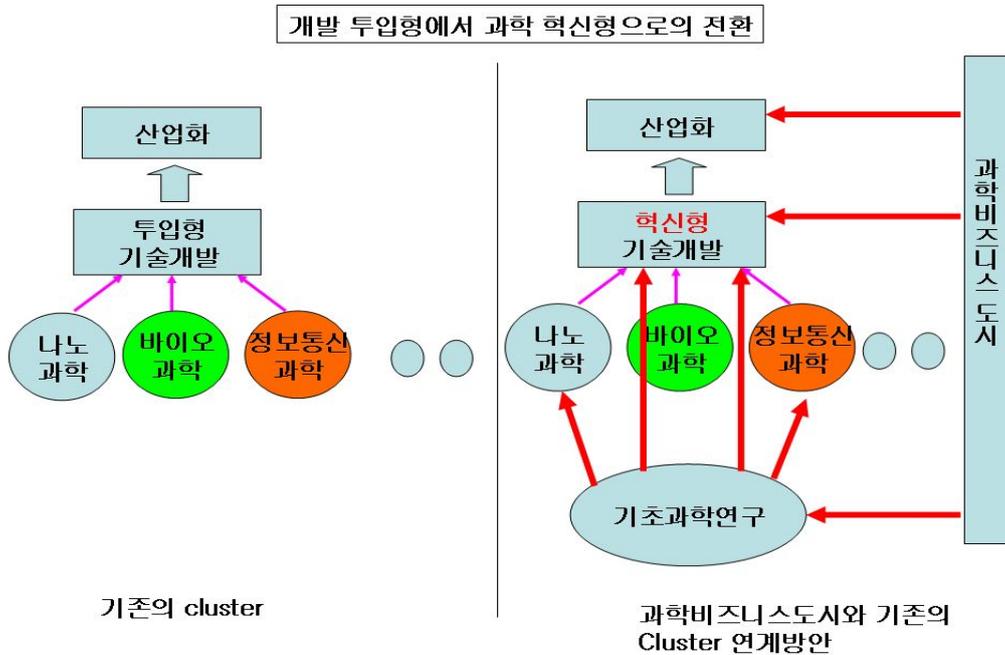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의의

- 미래의 지식은 과거와 달리 서로 다른 지식들이 결합하여 창조되는 창조적 지식이며, 산업도 서로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 일본 : IT, BT, NT 등의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신산업은 부품소재를 핵심으로 하는 융합신산업에 힘을 쏟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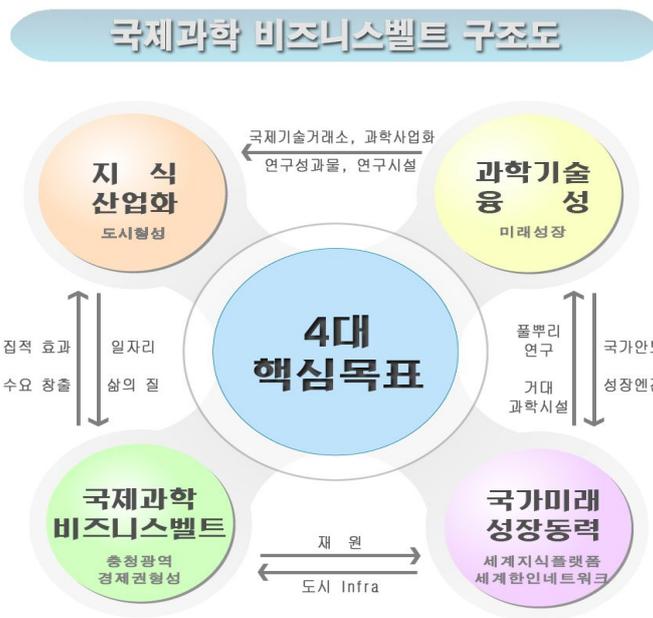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는 나노 분야 이후의 펨토 분야 및 최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한 산업 및 개발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학비즈니스 도시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함
- 기초과학 연구에서 파생(spine off)되는 연구 결과를 나노과학,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 및 그들 복합 분야 BIT(Bio Information Technology)에 연계시켜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중심 기관 및 그 역할의 동력화가 필요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의 연구와 산업간 연계>

- 즉 과학비즈니스도시는 기초과학연구에서 spin off 되는 결과를 각 연구단지에 흡수시키거나 또는 직접 그 결과를 기술개발의 더 나아가 산업화로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며, 각 연구단지 및 개발단지의 결과를 혁신형 기술 개발로까지 이끌며, 이후 산업화로의 기능을 담당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격은 세계 정상급의 과학이 연구되고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 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국제 네트워크를 가진 광역도시권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인재들이 모여 연구하고 생활하는 국제적 science metropolitan임

- 국제란 국제적인 기초과학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수준의 과학지식의 이전 및 교류가 일어나는 세계지식유입 의미
- 과학이란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최고의 석학들과 젊은 인재들을 유인하여 지식기반사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지식기반확보 의미
- 비즈니스란 기초과학연구소의 지식자본이 기업으로 확산되어 원천기술을 창출하여 창조적 상품과 산업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의미
- 벨트란 지속가능 경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와 소비시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자생적 경제권 형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단계

○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

- 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소로 미래원천기술 및 지식을 확보하고 세계 정상급의 후속 기초과학 연구세대를 육성

◦ 핵융합 연구병원

- 생리, 생화학, 계능, 심리 ; 의료기기개발 분야

◦ 신물질 연구개발센터

- 신약, 반도체, 고분자, 재료, 생체재료개발

◦ 미래장비개발센터

- 나노급 의료기술 개발, 초전도, 고진공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나노센서, 나노가공, 나노 트랜지스터 등

◦ 프론티어 기초연구센터

- 세포증식 및 기능조절 연구, 발생생물학, 뇌 및 신경연구

◦ 과학사업화 전략본부

- 법률, 회계, 전략 전문지식서비스의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사업화 지원

◦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정기적인 GKP 컨퍼런스, 워크숍, 국제지식축제 개최,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저개발국 지원프로그램 운영

○ 과학비즈니스네트워크구축 (SBN: Science-Biz Network)

- 기초과학지식의 수렴과 확산, 상품화 과정을 조성하는 기구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 대학, 기업의 지식교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과학과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인재를 구성과 국내외 연계 결합 구조를 만드는 실천적 기구 필요

◦ 기초과학, 응용과학, 연구지원 및 산업을 결합하는 Multi-Layer System 구축

◦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과학지식의 비대칭성 극복을 위한 교육, 정보 시스템 설계

◦ 국내 연구단지와 기업단지의 네트워크화

◦ 해외 과학지식산업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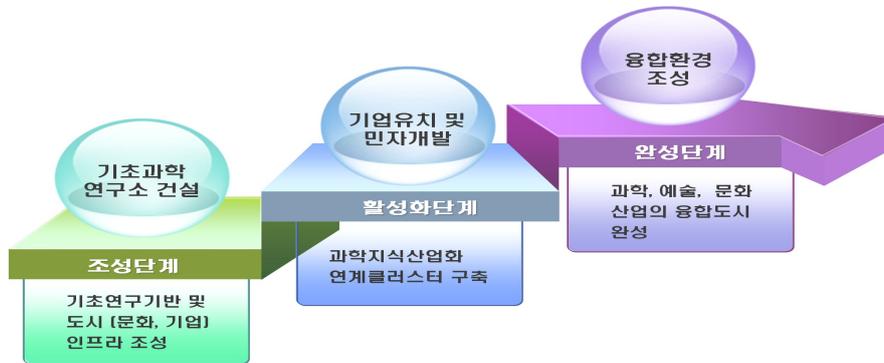
○ 국제과학비즈니스(중부권 지식산업) 벨트 구축

- 새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과학단지과 인근의 기존 과학단지를 연계시켜 지역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지역기능 벨트인 중부권 지식산업벨트는 국가전체의 산업기능과 중부권의 산업기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새로 건설되는 세종과학연구단지를 기존의 대덕연구단지 및 오송·오창단지와 연계하여 협의체 구성(DOS Belt Coop)
- 벨트내 과학단지 및 멤버 도시간 협력체계(벨트화 사업단) 확립
- 산학연 교류증진을 위한 협력단(산학연협력 사업단) 구성
- 과학단지 및 기타 지방도시 간 산학연 상호보완 및 선의의 경쟁체계 구축
- 전문가 풀로 구성된 기술마케팅지도팀과 대외홍보를 위한 홍보, 전시팀 운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단계별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성장을 견인할 산업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3단계에 걸쳐 개발 추진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단계별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대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대전, 인근 지역이 융합기술, 기초과학, 원천기술의 메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들어서게 될 최첨단 기초과학연구시설(예; 가속기)은 세계적인 대형 연구시설인바, 국내외 정상급 과학자들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적인 대형 복합연구시설이 도입되면 기존의 연구시설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원천기술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탄생될 것임
- 산업구조의 변화
 - 대전의 현재 제조업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IT, BT, NT, 부품·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이 기초과학·원천기술육성을 위하여 새로이 건립되기 때문에 벨트의 한 구성원인 대전의 산업구조가 장차 기초과학/원천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
- 광역 국제도시권의 형성
 - 대전인근에 세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제적 기준으로 개발되는 도시가 탄생되면 주변도시의 질적 변화(Up-Grade)가 예상됨
- 문화·예술관련 산업의 활성화
 -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만들어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공유하면서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신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장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도입될 문화의 환경(Convergence)
 - Salon 문화 환경, Sport, leisure 환경, Guggenheim 아시아문화 박물관 유치
 - 동양 디자인 박물관 유치, 첨단 과학관 설립, 놀이 실험 공원
 - 디즈니랜드 격의 첨단 영상공원 (체험 가능한 시설), 자연사, 환경박물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발전 전략

○ 단계별 전략

1단계(2008~2009) : 대덕특구의 노하우 전수기

- 이 기간은 중앙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초작업을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덕특구가 그간 시행한 각종사업의 경험(외국 자본, 기업, 연구소 유치 등)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전수시켜 대덕특구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함

- 기초·응용분야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연구성과 사업화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지도 증진 및 네트워킹 실시
- R&D형 특구개발 및 운영 노하우 등 정비

- 세종, 오송·오창과 공간적인 연계개발 방향으로 기반조성사업 추진
 - ▶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421만m²)을 조기 추진하고, 이를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패키지 형태로 병행하여 개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에 글로벌 수준의 지식·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 ▶ 융복합 기술상용화센터, BT-IT-NT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조성, 글로벌 지식투자펀드 등을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 연접지에 설립·운영하는 세부 계획 마련(대덕특구 2단계 개발부지 내)

2단계(2009~2012) : 기능분담 및 위상 확립기

- 이는 국가의 과학벨트 정책이 실체를 보이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와 대덕특구, 오송, 오창이 각각의 핵심역량과 특화된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에서 각각의 기능 분담을 통해 과학벨트 개별 구성체들의 위상을 명백하게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과 문화, 정주 기능 중심으로 육성
- 대덕특구는 공공기술 사업화의 전국적 허브로 육성하며, 전국 각지역 혁신클러스터의 Hub & Spoke 역할 강화

-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지식-생태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에 필요한 첨단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

- Bio, Energy, Material 기술사업화를 통해 생태친화, 미래형 도시환경 조성 및 U-Health 서비스 제공

3단계(2012년~) : 성과 확산기

- 기초과학(Science)-응용연구개발-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각 거점이 가진 기능적 연계를 최적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한국의 신성장 엔진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 과학관련 문화 및 교육산업화를 통한 기초과학 우수 연구성과의 비즈니스화
 - Science Village, 과학체험 테마파크, BBC Open University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대덕 R&D특구 지원본부의 위상 재정립

- 대덕 R&D 특구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특별법에서의 일부조항으로 인하여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의 출혈경쟁과 중복투자의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예컨대, 법 제4조 제②항에 ‘대덕 연구개발특구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등)
- 대덕 R&D 특구는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행정적 권한이 거의 미치지 못하여 상호간 협조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현행 ‘대덕특구특별법’ 제49조 ①-②항(지원본부의 이사장: 이사회의 의결, 이사: 15인이하, 그리고 감사의 임면)을 개정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전체이사 1/3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운동을 추진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대전시 발전 전략

○ 창조도시건설로 도시발전 방향전환

- 창조도시에는 창조산업이 기반산업이 되어야 하는바,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란 개인적인 창의력, 스킬 및 재능에 의존하여 지적자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산업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예술, 공연, 음악, 전시회, 디자인, 건축, 소프트웨어, 게임, 영화, 패션, 출판, 광고, 건축설계, 방송, 전통문화 등 매우 다양함
- 창조도시들은 모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원화 사회란 공통된 특성을 보여준다. 결국 도시의 문화가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한다.

○ 대전·충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 상품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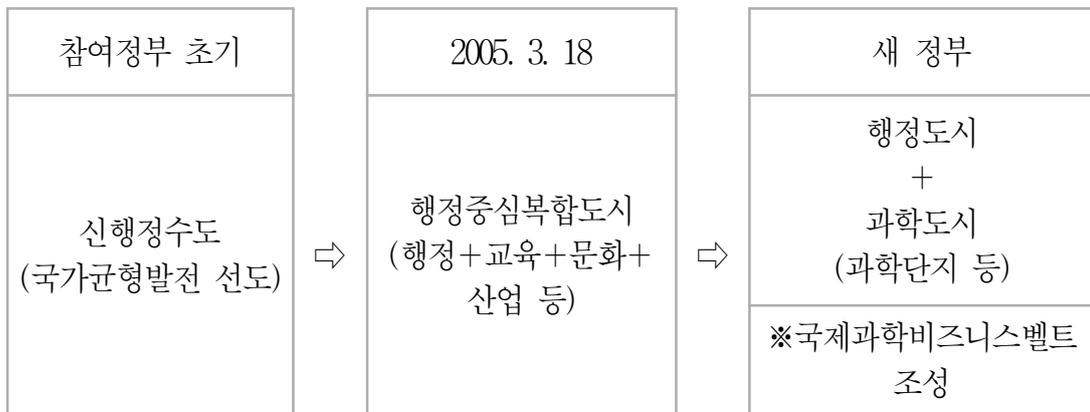
-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정책과 함께 대전시를 국제 업무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고품격의 리조트 및 레저관광단지, 국제수준의 공연장 등의 유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권 경전철 및 순환도로 건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비해야할 시설 가운데 하나가 국제공항인 바, 과학도시(세종시)의 최대 배후도시가 될 ‘대전↔과학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연장 70km의 경전철을 건설하여 과학도시와 인근 도시 및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또한 ‘대전↔과학도시↔천안↔청주’를 순환하는 직경 60km, 연장 190km 정도의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2시간 이내에 과학도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위상 및 기능 변질 우려와 대전광역시 대응방안

- 당초 정치권이 수도에 버금가는 행정에다 복합기능을 추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2005.3.18)’을 제정 및 공포하였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 이전 계획 확정·고시(2005.10.5)
- 최근 인수위(이명박 당선인) 측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중앙행정기관 이전 규모의 축소 불가피
 -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볼 때, 과거 수도권 집중보다 강력한 블랙홀로 작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및 위상이 변질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므로, 새 정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표를 달성하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 수립』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성격이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라기 보다는 성장동력 사업으로 세종과학산업밸리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세종 과학산업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 명분은 행정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거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 집적지역으로 내세우고 있음

- 내용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세종과학산업밸리라는 명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능과 발전내용과 유사한, 또한 강화된 기능을 계획하고 있어, 당선인측(인수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과학기술연구소 유치 사업 : 세종밸리 권역 내(66만㎡) ◦ 세종 R&D 센터 설립 및 기술박물관 설립사업 ◦ 과학기술 거점대학 클러스터 구축 사업 ◦ R&D 산업화 테스트베드 사업 : 세종밸리 권역내(430만㎡) ◦ 녹색산업 R&D 허브 조성 사업 : 세종밸리 권역내(400만㎡) ◦ 국가 첨단 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 : 세종밸리 권역내(500만㎡) ◦ 국제과학기술 테크노파크설립 사업 : 세종밸리 권역내(6.6만㎡) ◦ 세종과학산업밸리 산학연연계 교류센터 설립 : 세종밸리 권역내(6.6만㎡) ◦ 동북아 암전문 연구 및 진료센터 조성사업 : 세종밸리 권역내(330만㎡) ◦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 : 세종밸리 권역내
--

- 위와 같은 사업들이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방향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도시’라기 보다는 ‘과학(산업)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이는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대도시로의 대전의 기능 및 위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대전시는 새정부(인수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정치권 등에 당초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성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벨트 형성은, 기 형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쇠퇴시킬 수 있으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강점, 국민의 과학의 요람 지인 엑스포과학공원(science park) 활용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기능 강화 등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전의 산업 중심활동도 현재와 같은 제품생산, R&D 연구 보다 기술 상품화, 기술이전거래, 지적재산권보호 등 기술 중개무역, 기술이전 국제법률 상담, 지적재산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할 것임
-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엑스포과학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 파크』 조성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지 역할

☞ 행복도시건설과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 따른 3개시도의 입장

※ 새정부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5+2 광역경제권 구축, 금강운하 건설 등의 정책과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과학산업벨리’ 조성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 모색이 필요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 변화

- 당초 행정수도에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그와 다른 ‘세종과학산업벨리’의 조성을 통해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의 중심 도시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리와 세종과학산업벨리의 지리적 범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세종과학산업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오송·오창산업단지’를 연계한 한국판 실리콘벨리로 기초과학을 비즈니스로 연계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대덕연구개발특구~오송생명과학단지’를 3개 거점으로 상호 연계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 집적 지역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제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자체가 행정도시(세종)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도시의 중심축으로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충청권 3개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세종과학산업벨리’의 조성이 충청권의 공동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자족성이 가진 도시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15~20만명의 고용을 위한 기반이 있어야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자족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광역적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역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로서 세종과학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세종과학산업밸리 조성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나?

○ ‘세종과학산업밸리’의 지리적 범위

단 계	공간적 범위
1단계 초기조성	◦ 행정도시 전역과 대덕연구개발특구(약 2130만평),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그 연접 지역이 포함된 삼각형 지역(행정구역상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대전광역시 일부, 청원군 일부, 연기군 일부 지역 포함)
2단계 확장단계	◦ 주변의 공주, 계룡, 청주지역을 포함하는 다이아몬드 지역
3단계 확장단계	◦ 천안, 아산, 음성, 진천 등을 포함하는 충청권 전역

○ 세종과학산업밸리의 조성 목적

- 대덕연구단지가 그동안 다져온 과학연구의 축적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을 육성코자 함

○ 개발방향 : 다핵심 네트워크형 개발

- 일극집중형 개발이 아니고, 대덕, 오송, 행정도시의 3개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각 거점별 기능 특화와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도모
- 충청권 3개 시·도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음

<3개 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발전 관련 정책 제시(안)>

구분	주요 내용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여년간 지속적으로 R&D 역량과 인프라를 축적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장동력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 선택과 집중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축으로 행정도시, 오송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초·응용과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연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강화 ◦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연구 및 생산클러스터 구축 ▸ 뇌·암 관련 특성화된 첨단의료산업 복합단지 대덕특구 입지 ▸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 집적화단지 조성 ▸ 첨단기술 산업화단지 조성
충청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학중심형 내륙경제자유구역지정(4대 핵심사업단지+2대 지원사업단지로 개발), 오송신도시권, 오창과 학산산업단지, 청주하이테크산업단지, 공학비즈니스시티건설, 중부권복합화물기지 확대개발, 복합문화위락단지 개발 ◦ 동북아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 바이오연구타운 조성 ▸ 임상이행시험 및 안전문진료센터 유치 ▸ 오송단지 내 노화종합연구소 건립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비즈니스벨트(대덕특구·행정도시·청주·오송·오창) 조성 ▸ 오송·오창단지 BINT(BI, IT, NT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기술: Convergence Technology) 융합 기술특구 지정 ▸ 오송·오창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포함 건의 ▸ 오창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허브구축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과학산업벨리 조성과 관련하여 공주 장기지역에 국제과학기업단지(1,650만㎡) 건설을 비롯하여, 세종과학산업벨리의 지리적 범위를 천안·아산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아산 지역에 신소재부품산업단지(800만㎡) 조성 ▸ 논산·계룡지역에 대전과 연계한 국방과학클러스터 조성 ▸ 도청이전 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기능적 연계방안 필요 ▸ 도청이전 신도시에 친환경산업 집적화단지(660만㎡) 조성 ※ 세종과학산업벨리 사업과 새정부의 정책사업, 자치단체 희망사업을 합하여 사업계획 마련 ◦ 잔여지역 대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 잔여지역의 위기의식 불식방안 마련 ▸ 연기군 잔여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 주변지역 대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특별지원수단(CB 지원사례) 강구(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 주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대전시 발전 전략

○ 세부과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과 역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창조도시대전 발전 전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문화예술기능 강화 방안

○ 일시

- 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3월 10~13일 경)

■ 대전광역시 조직개편 방향

○ 대전광역시 조직 현황 및 추이 ('08. 1. 30.)

- 조직 편제
 - 1실 7국 2본부 3관
- 민선3기 대비 행정조직 및 공무원 증가 추이

구분	'05. 6. 30.	'07. 12. 31.	증감
조직편제	1실 7국 1본부 2관	1실 7국 2본부 3관	1본부 1관
국장	9	10	1
과장	58	65	7
5 ~7급	1,039	1,176	137
지방공무원수	2,782	3,077	295

※ 구청은 제외한 대전시 산하(사업소, 소방본부포함) 현원

■ 대전광역시청 조직 재편의 필요성

- 인수위 정부운영 기조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
 - 인수위 중앙정부조직 개편안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적 특성(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07년.12.13) 제9조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
 - 세계화로 인해 지방정부간 국제교류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폭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기획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지식산업이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함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요청됨

- 기술·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의 복잡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처럼 기능을 광역화하여 통합지향형, 자체완결형 문제해결 조직 구축의 필요성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 쇠퇴 및 사회통합력이 약화되고 있음
 - ▶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긴요
 - ▶ 갈등 완화 및 합의 도출 기능의 강화로 내·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편제 구축

ㄹ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과 특성

기본방향

-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의 대중앙 연계성·대응성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여건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기획기능을 강화
 - 작은 시정부 지양
- 지역경제·산업활동을 북돋우는 능동정부 구현
 - 자치단체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
 - 지역주민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규제보다는 촉진정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지방정부
 -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임지는 신상필벌 확립
 - 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 동(洞) 기능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
 - 현장 행정의 개혁, 혁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
- 부서를 타과하여 기능을 통합하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실용정부
 -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국제 도입
 - 국·실장의 재량권 대폭 확대

개편원칙

- 현장지향형 조직편제를 위한 기존 조직에 대한 재검토·정비
 - 시대에 뒤쳐진 일이나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고,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편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충청권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 등 새로운 광역경제권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조직편제
- 기능이 중첩되는 조직을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 각 부서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통합
 - 조정기구를 정비해 정책결정과정을 간소화
 -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통해 조직재편에 반영

개편의 특성

-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과 거시적인 기획·조정기능 강화의 조직편제
 - 시정방향 및 장기·거시적 관점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는 기획관리실의 역량 강화
 - 재정전략·예산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결합하여 시정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운영의 조타수 역할 기대
-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을 정비
 -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지역주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
- 각 부서에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역화
- 인수위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하는 조직편제로 전환
 - 충청광역경제본부 설치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대전광역시 조직재편의 필요성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과 대전광역시 조직편제 대응방안

개편부서	기능	대전광역시 대응부서	기능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인력개발/성과후생/고위공무원 지원/인사정보관리/정부혁신/전자정부/국가비상계획/안전정책/지방재정세계/지방행정/지역균형발전/청사관리 및 정부서무/정부조직 진단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국(5과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과/인력개발과/세정과/회계계약과/시민봉사실(4과1실) ◦ 소방본부(3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행정과/예방안전과/대응구조과(3과) ◦ 교통건설국(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사채용/공무원단체 지원/후생복지/세정/체납징수/세무지도/세입관리/자치행정/행정지원 ◦ 구조지원/화재조사/구급운영/안전관리/소방행정/예방지도/소방홍보 ◦ 방재총괄/안전점검/자연재난/경보통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기획·조정/재정운용/국고관리/조세정책/경제협력/공공기관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상국(4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국제통상과(3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책/소비자정책/국제협력/통상지원/일자리창출
지식경제부	산업육성정책/무역투자유치정책/에너지·자원정책/R&D 정책/연구개발 특구 기획/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산업본부(4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지원/특구관리·산학연/과학진흥/전략산업/첨단기업육성
국토해양부	건설교통정책기획/해양정책/해운·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건설국(5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운송주차관리과/건설도로과/방재과 ◦ 도시주택국(4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도시균형개발과/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기획/교통시설/대중교통/버스경영/운송물류/차량관리/건설행정/도로계획 ◦ 도시정책/도시계획/도시균형개발/건축행정/도시환경정비
농수산식품부	농업·농촌정책/축산정책/식량정책/검역/국제농업/수산·어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통상국(1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농산물유통/축산정책
인재과학부	인적자원개발정책/초중등교육정책지원/평생교육지원/대학정책지원/기초과학정책지원/과학기술인력양성/국립과학관 관련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협력계 ◦ 미래산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산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육사업지원/평생학습지원/지역대학지원(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조) ◦ 지역과학산업진흥
보건복지여성부	사회복지/보건의료/보험연금/보건산업육성/양극화민생대책/저출산고령사회/여성정책·권익증진/가족·보육/청소년정책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여성국(4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정책과/여성가족청소년과/노인장애복지과/보건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약/건강증진/노인복지/장애인복지/복지시설/여성정책/가정복지/저출산고령화
환경부	환경보호정책/수질오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녹지국(4과2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공원산림과/푸른도시사업단/자원순환과/생태하천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획/대기보전/자연환경/생활공해/수질행정/수질보전/하수관리/자원재활용
문화부	문화진흥정책/문화재관리/관광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국(3과1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과/체육지원과/관광문화재과/전국체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체육지원/생활체육/체육시설/관광기획/문화재정책/관광홍보/관광개발

※ 인수위 중앙정부조직개편안 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 중에서 자치단체사무와 관련성이 없는 부처(법무부, 외교통일부, 국방부, 노동부)의 기능을 제외한 부처의 주요기능을 제시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안) : 1실 7국 1본부

- 기존('08. 1. 31) 조직체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방본부의 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여 대국체제로 운영
- 또한 교통건설국의 방재과 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여 유사기능의 통합을 지향

< 요약 >

새정부 국정아젠다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전략

2008. 2.

< 목 차 >

■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	1
■ 수도권 규제완화	2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6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10
■ 대전광역시 조직개편 방안	17

■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

- 국가비전
 - ▶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 국정철학
 - ▶ ‘화합적 자유주의’ (Harmonious Liberalism)
- 행동규범
 - ▶ ‘창조적 실용주의’ (Creative Pragmatism)
- 국정목표
 - ▶ ‘신발전체제’
- 5대 국정 지표
 - 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 ② 활기차고 열린 시장
 - ③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 ④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 ⑤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 국정아젠다
 - ▶ 작은정부의 구현
 - ▶ 규제완화 추진
 - ▶ 광역경제권 구상
 - ▶ 한반도 대운하

■ 수도권 규제완화

- 규제(regulation)이란 법적 주체의 행위나 활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며, 수도권규제완화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말함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공장중 도시형업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신·증설 금지 (이산산단 제외) ○ 14개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100% 증설 허용 ○ 외투 기업 25개업종 한시적 허용('07년말까지) ○ 8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 한시적 허용('06년말까지) ○ 중소기업 공장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신·증설 금지 ○ 공해없는 중소기업 신·증설허용(1천㎡이내)
	○ 공장총량 규제		
대 학	4년제	신설금지 (서울로는 이전 금지)	신설금지, 소규모(50인)대학 허용
	전문 (산업)	신설허용 (단, 서울제외)	신설 허용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총량규제 ▶ 4년제 대학 증원은 심의 후 허용,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 이내 허용, 초과는 심의후 허용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금지 (중앙부처 제외) ○ 증축·매입·임차는 심의 후 허용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규제 폐지	금 지
개 발 사업	택지 조성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공업 용지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관광지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조 세	취·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	-	-

- 새정부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되는 규제는 전반적으로 혁파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기업규제 뿐만아니라 수도권에서 자유스러운 기업활동을 저해해 왔

- 던 각종 규제는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며(런던권 752(인/km²), 수도권 2,027(인/km²))
 -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국토면적의 11.8%에 전국인구의 48.3%(2005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액(2005년 기준)의 47.7%, 전국 제조업체의 56.6%(2004년 기준), 전국 공공기관의 85.6%(2003년 기준)가 집중

ㄹ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차원의 대응

- 기 확정된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 및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기업대책 7개항, 사람대책 7개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새정부와의 협약체결 추진
 - 새롭게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에 기존의 핵심적인 균형발전시책(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함
 - ▶ 동법의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내용은 ‘동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함
- 가칭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 제정시 비수도권 육성제도를 도입
 - 예컨대,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역 내에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금융, 교육, 의료, 문화 등) 및 SOC(교통, 물류기지) 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제도
- 광역경제권 5+2 구조를 ‘1+4+2’체제로 전환추진
 - 인수위는 전국을 5대(수도, 충청, 호남, 대경, 동남) 광역경제권과 2대(강원, 제주)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조화 하여, 수도권과 4개의 경제권을 동등한 차원에서의 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발표함
 - 그러나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과 여타

- 의 광역경제권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음
- ▶ 광역경제권이 5+2 구조로 고착될 경우, 수도권외의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 있으며, 수도권을 초광역권으로 설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치중하고, 중광역권은 국제적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특별광역권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야 할 것임
 - 따라서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으로 하되 강원과 제주와 같이 ‘수도권’도 나머지 4개 경제권과는 특별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7개의 광역권을 초광역권(수도권), 중광역권(충청, 호남, 대경, 동남), 특별광역권(제주, 강원) 등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함
 - 중앙의 ‘광역경제권(5+2) 관리기구 운영시 7대권역 대표자 참여
 - 가칭 ‘광역경제권추진위원회’ 또는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의 구성시 7대 권역의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13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활성화를 통한 공동 대응
 - 수도권집중과 규제완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수도권자치단체협의회의 기능을 보장하여 가칭 ‘비수도권지방자치단체연합(13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로 발전시키고, 가칭 13LGA는 중앙에 본부를 두며, 각 광역경제권별로 지역사무소를 둠

수도권 규제완화의 충청권 및 대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수도권 규제의 내용은 공장신증설, 대학신증설, 공공청사신증설, 대형건축물의 신증설,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 중과세제도가 있음
- 규제완화는 일반적으로 기업규제 즉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된 것이 주종이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충청권 및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음

구분	파급효과	대응전략
충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공장에 대한 규제완화는 그동안 충청에 이전했던 기업의 U-turn 현상의 가속화 초래(02-06년사이 대전에 57개, 충북 124개, 충남 197개 이전) ○ 충청권으로의 공장이전 계획의 변경 및 취소사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권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친기업적 정책개발과 반기업적 규제의 발굴 및 혁파(충청권경제인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가시화를 위한 로드맵의 작성과 인센티브개발
대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의 기업 U-turn 현상에 의한 피해는 충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대덕특구의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침(수도권의 성장관리지역내의 14개 첨단업종 100% 증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첨단기술산업화단지 조성의 가시화 및 입지의 인센티브 홍보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청사진과 입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홍보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 광역경제권의 구상과 충청권의 공동발전방안

○ 인수위의 광역경제권발전 구상의 발표와 충청에 미치는 영향

-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충청권에 미치는 위기요인

- ▶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충청권 경제위기론 현실화
- ▶ 충청권내 특정지역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 및 양극화 현상 발생

-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기회요인

- ▶ 기획, 재정 자율권 보장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 가능
- ▶ 기 출범된 충청권경제협의체의 기능 수행에 탄력
- ▶ 국토중심지로서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허브지역으로 발전 가능
- ▶ 세종시-대덕특구-오송·오창을 연계한 광역경제권 구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광역경제권발전 구상과 충청권의 대응

- 충청권경제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충청권특별법'(가칭)과 새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가칭)과의 관계 재정립
- 충청권 3개시도의 공조협력지원체제의 보강(독립된 사무국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공동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구체적 로드맵 완성, 기업친화적 금융서비스, 세제지원 등 저기업 유인체계 공동개발, 대전-충청 해외무역사무소의 공동운영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새로운 충청권 지역협력사업의 발굴필요(월트 디즈니랜드 공동유치사업, 충청권 문화예술교류협력사업, 충청권 관광협력사업, 충청광역권 스포츠 리그 구축사업, 지역특산물 공동시장 운영(e-마켓 포함))

충청권 공동발전연구단 운영 활성화

○ 설립의 목적

- 대전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 사업의 내용

- 충청권 통합경제권 구축을 위한 연구
- 광역 교통망 및 물류유통체계 연구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연구

○ 추진 체계

- 충청권 공동발전 연구단 구성
- 충청권 공동발전 연구단 사무국 운영

충청광역경제본부의 대전유치전략

○ ‘충청광역경제본부’의 대전유치 추진

- 광역경제권의 추진체계와 자원조달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 <li style="padding-left: 40px;">→ 충청광역경제본부 → 시도지방자치단체 ◦ 사업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경제권특별회계(국가균형특별회계 재편+국가보조금+지방교부세+신규재원)
--

- ‘광역경제본부’의 조직형태와 기능은 어떤 것인가?

사례	형태	관리운영	정부관계
영국	지역개발청(RDA)	이사회, 정부재정지원	정부산하
미국	지방정부연합	민간, 예산운영	자율조직
일본	특별지행행정기관	정부재정	국가산하기관 (경제산업국)
인수위원회	특수목적법인(SPC)	국가보조+민간자본(?)	(?)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청	국가+지방재정	지자체소속
자치정보화조합 등	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조합회의, 지자체 출연금	특별지방자치단체

※ 인수위의 발표에 의하면, 광역경제본부는 대덕 R&D 특구지원본부와 같이, 중앙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면 지방자치제와 분권화라는 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의 지역정부모형(regionalism model)을⁵⁾ 도입해야 함

5) 현대 사회의 생활권이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의 분리보다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확대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역사적으로 고정된 종래의 기초정부 경계와 구역에 근거한 거버넌스구조를 넘어서 생활권과 시장경제의 활동에 부합하는 공간적 외부효과의 확대에 인한 거버넌스 중심의 광역행정체제 모형

- '충청광역경제본부' 유치를 놓고 어디와 경쟁해야 하는가?

- 대전 : 대덕 R&D 특구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유치를 주장할 것임
- 충북 : 충북은 오송·오창 지역에 유치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충남 : 정부조직개편으로 세종시 규모의 축소에 대한 대체대안으로 행복도시에 유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충청광역경제본부' 유치경쟁에 있어서 대전의 강점은 무엇인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덕R&D특구의 성장과 도시기능의 집적

- 그럼 '충청광역경제본부'가 입지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 과학엑스포공원의 일부용도변경(상업용지)을 통하여 이지역에 입지시킴

- '충청광역경제권본부'의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지역본부유치추진팀' 가동
- 광역경제지원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유치논리의 개발과 예정입지의 타당성 분석을 조기에 실시함
 - ▶ 광역경제권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실시

광역경제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주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방안
- 세부과제
 - 광역경제권체제하에서 충청권경제협의체의 역할과 위상
 - 광역경제권의 바람직한 행정체제 모형
 - 광역경제권의 재정운용 방안
- 일시: 2008년 3월 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대전시 대응방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단계

-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소(세계 정상급 연구자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소로 미래 원천기술 및 지식을 확보하고 세계 정상급의 후속 기초과학 연구세대를 육성)
- 과학비즈니스네트워크구축(SBN: Science-Biz Network)
 - ▶ 기초과학지식의 수렴과 확산, 상품화 과정을 조성하는 기구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 대학, 기업의 지식교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과학과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인재풀 구성과 국내외 계 결합 구조를 만드는 실천적 기구 필요
- 국제과학비즈니스(중부권 지식산업) 벨트 구축
 - ▶ 새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과학단지과 인근의 기존 과학단지를 연계시켜 지역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지역기능 벨트인 중부권 지식산업벨트는 국가전체의 산업기능과 중부권의 산업기능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단계별 추진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성장을 견인할 산업구조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3단계에 걸쳐 개발 추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대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대전, 인근 지역이 융합기술, 기초과학, 원천기술의 메카
- 산업구조의 변화
 - ▶ 대전의 현재 제조업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IT, BT, NT, 부품/신소재 등 첨단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이 기초과학/원천기술육성을 위하여 새로이 건립되기 때문에 벨트의 한 구성원인 대전의 산업구조가 장차 기초과학/원천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

- 광역 국제도시권의 형성

- ▶ 대전인근에 세종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제적 기준으로 개발되는 도시가 탄생되면 주변도시의 질적변화(Up-Grade)가 예상됨

- 문화·예술관련 산업의 활성화

- ▶ 과학과 예술이 만나서 새로운 장르가 탄생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와 산업이 만들어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공유하면서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신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장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성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발전 전략

1단계(2008~2009) : 대덕특구의 노하우 전수기

- 이 기간은 중앙정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초작업을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덕특구가 그간 시행한 각종사업의 경험(외국 자본, 기업, 연구소 유치 등)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전수시켜 대덕특구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함)

2단계(2009~2012) : 기능분담 및 위상 확립기

- 이 기간은 국가의 과학벨트 정책이 실체를 보이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와 대덕특구, 오송, 오창이 각각의 핵심역량과 특화된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에서 각각의 기능 분담을 통해 과학벨트 개별 구성체들의 위상을 명백하게 함

3단계(2012년~) : 성과 확산기

- 기초과학(Science)-응용연구개발-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각 거점이 가진 기능적 연계를 최적화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한국의 신성장 엔진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 대덕 R&D특구 지원본부의 위상 재정립

- 대덕 R&D 특구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특별법에서의 일부조항으로 인하여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의 출혈경쟁과 중복투자의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예컨대, 법 제4조 제②항에 ‘대덕 연구개발특구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등)
- 대덕R&D특구는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행정적 권한이 거의 미치지 못하여 상호간 협조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현행 ‘대덕특구특별법’ 제49조 ①-②항(지원본부의 이사장: 이사회의의 의결, 이사: 15인이하, 그리고 감사의 임면)을 개정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전체이사 1/3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운동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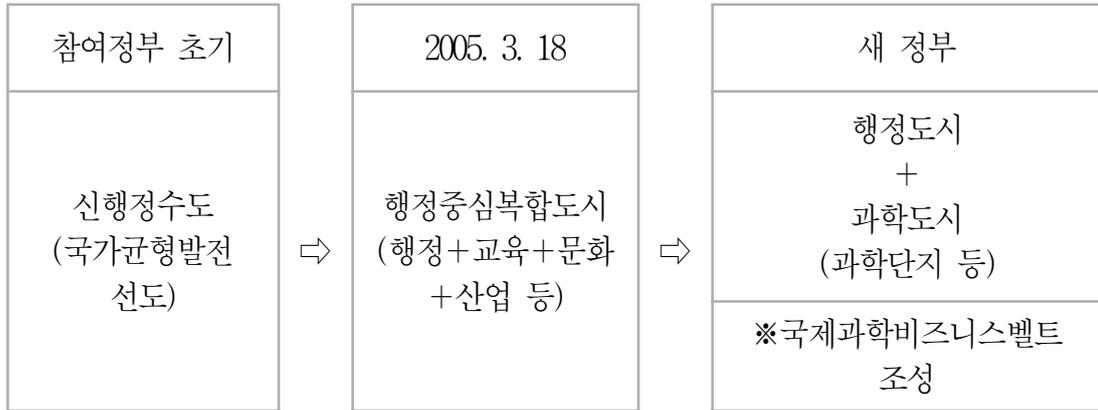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대전시 발전 전략

- 창조도시건설로 도시발전 방향전환
- 대전·충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관광·문화 상품개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권 경전철 및 순환도로 건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위상 및 기능 변질 우려와 대전광역시 대응방안

- 당초 정치권이 수도에 머금가는 행정에다 복합기능을 추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2005.3.18)’을 제정 및 공포하였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기관 이전 계획 확정·고시(2005.10.5)
- 최근 인수위(이명박 당선인) 측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중앙행정기관 이전 규모의 축소 불가피
-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볼 때, 과거 수도권 집중보다 강력한 블랙홀로 작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및 위상이 변질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없으므로, 새 정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표를 달성하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 수립’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성격이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라기 보다는 성장동력 사업으로 세종과학산업밸리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세종 과학산업밸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보면, 명분은 행정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거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 집적 지역으로 내세우고 있음
- 내용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세종과학산업밸리라는 명목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능과 발전내용과 유사한, 또한 강화된 기능을 계획하고 있어, 당선인측(인수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사업들이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방향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도시’라기 보다는 ‘과학(산업)도시’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이는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대도시로의 대전의 기능 및 위상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대전시는 새정부(인수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정치권 등에 당초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성격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정부의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벨트 형성은, 기 형성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쇠퇴시킬 수 있으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당위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산실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강점, 국민의 과학의 요람지인 엑스포과학공원(science park) 활용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의 기능 강화 등 대전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 건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전의 산업 중심활동도 현재와 같은 제품생산, R&D 연구보다 기술 상품화, 기술이전거래, 지적재산권보호 등 기술 중개무역, 기술이전 국제법률 상담, 지적재산관련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할 것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엑스포과학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 파크’ 조성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심지 역할

행복도시건설과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 따른 3개시도의 입장

※ 새정부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5+2 광역경제권 구축, 금강운하 건설 등의 정책과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구상하고 있는 ‘세종과학산업밸리’ 조성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 모색이 필요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당초 행정수도에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당초 취지와는 다른 『세종과학산업밸리』 조성을 중심으로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의 중심 도시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자체가 행정도시(세종)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도시의 중심축으로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충청권 3개 시·도와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세종과학산업밸리』의 조성이 충청권의 공동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자족성이 가진 도시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15~20만명의 고용을 위한 기반이 있어야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자족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광역적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광역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로서 세종과학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세종과학산업벨리의 조성 목적

- 대덕연구단지(가)가 그 동안 다져온 과학연구의 축적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을 육성코자 함

○ 개발방향 : 다핵심 네트워크형 개발

- 일극집중형 개발이 아니고, 대덕, 오송, 행정도시의 3개 거점지구를 중심으로 각 거점별 기능 특화와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도모

○ 충청권 3개 시·도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보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음

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 주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가)과 대전시 발전 전략

○ 세부과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가)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상과 역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가)과 창조도시대전 발전 전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가)과 문화예술기능 강화 방안

○ 일시

- 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3월 10~13일 경)

■ 대전광역시 조직개편 방향

▷ 대전광역시청 조직 재편의 필요성

- 인수위 정부운영 기조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
 - 인수위 중앙정부조직 개편안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수용하고 지역적 특성(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구성
-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
 - 세계화로 인해 지방정부간 국제교류가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증폭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기획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지식산업이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함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요청됨
 - 기술·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의 복잡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선진국처럼 기능을 광역화하여 통합지향형, 자체완결형 문제해결 조직 구축의 필요성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 쇠퇴 및 사회통합력이 약화되고 있음

기본방향

-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의 대중앙 연계성·대응성 강화
- 지역경제·산업활동을 북돋우는 능동정부 구현
-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지방정부
- 부서를 타파하여 기능을 통합하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실용정부

개편원칙

- 현장지향형 조직편제를 위한 기존 조직에 대한 재검토·정비
- 기능이 중첩되는 조직을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개편의 특성

-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과 거시적인 기획·조정기능 강화의 조직편제
 -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을 정비
 - 각 부서에 흩어진 비슷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역화
 - 인수위의 중앙정부조직 개편에 대응하는 조직편제로 전환
-
-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안) : 1실 7국 1본부
 - 기존('08. 1. 31) 조직체계의 기본적 틀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방본부의 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여 대국체제로 운영
 - 또한 교통건설국의 방재과 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통합하여 유사기능의 통합을 지향